

NEWS

2025년 3월 7일 금요일

문체부 서울예술단 내년 광주에 등지른다

광주신보 이사장 후보에 염규승 전 광주은행 부행장

광주신보보증재단 이사장 후보로 염규승 전 광주은행 부행장(사진)이 내정됐다. 광주신보 보증재단 이사장전임 위원회 서류·면접심사. 재단 이사회 의결 등 공무를 거쳐 추천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염 전 부행장을 최종 이사장 후보로 결정했다.

염 후보자는 1995년 광주은행에 입사해 영업3본부장,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30여년간 광주은행에서 재직하면서 금융인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등 역량을 키운 금융전문가다. 염 후보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예정됐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31일 보고서가 채택되면 광주시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면 '영산강 익사이팅'서 계속

영산강 익사이팅존에는 고대 마한 문명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까지 성장한 광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물과 디지털 예술을 소재로 하는 상상력이 있는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이 4000㎡ 규모로 들어선다.

또 광주도심 속 레저문화를 새롭게 이끌어 갈 역동적인 인공서핑장과 물놀이, 휴식이 융합되는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물놀이체험시설은 실내인공서핑장 1000㎡, 자연형물놀이장 1만㎡, 잔디마당 1만1800㎡ 규모로 4개월 내내 '특별한 재미와 휴식이 있는 복합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또 Y프로젝트 중 황룡강의 핵심사업인 '송산섬 플로팅수영장'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원지로 잘 알려진 4만4000㎡의 송산섬에는 500㎡의 플로팅 수영장, 어린이 테마놀이터, 잔디마당, 신비로운 분위기의 미스트원을 조성, '어린이 테마정원'으로 특화한다. 광주시는 설계회사를 선정, 실시설계 및 공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2026년 8월에 완공, 시민들을 맞을 계획이다.

본사인사

△고선주 命 문화체육관광부 겸 전라도인문위원장 <2025년 3월 7일자>

'문화비전 2035' 발표...명칭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변경 국립예술단체 첫 지방 이전...문화향유·관광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단체인 서울예술단이 아시아예술단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엔 광주로 이전, 활동한다.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은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서울예술단 이전하면, 지역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예술단이 국

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주단체로 이전한다고 6일 밝혔다.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는 지역 문화 균형과 세계문화 선도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의 지역 이전 및 협력모델을 단계적으로 재구조화한다.

서울예술단을 내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 추진한다. 단체 이름도 서울예술단에서 국립아시아예술단(가칭)으로 바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국 예술가들과 국제교류, 인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레퍼토리 공연 제작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예술단체 제작진과 지역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 건립, 지역별 특화 방향,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도 검토한다.

서울예술단은 1985년 9월 남북예술공연단 교환공연 이후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 회복과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1986년 '88서울예술단'으로 창단. 한국적 소재의 창작 가무극 등을 통해 한국의 공연예술 발전에 앞장서 왔다.

서울예술단은 그동안 '잃어버린 얼굴 1895', '운동주, 달을 쏘다', '신과 함께_저승편' 등 한국적 소재와 양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광주시는 서울예술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한 '운동주, 달을 쏘다'처럼 지역 문화와 이야기를 소재로 한 특화공연 콘텐츠를 제작, 지역 대표 공연브랜드로 성장시켜 지역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문화관광 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서울예술단이 그동안 흥행에 성공한 다양한 작품 레퍼토리를 보유한 만큼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예술가 및 단체들과 협업으로 지역문화 역량이 강화되는 등 동반 상승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은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및 지역예술단체 등과 협력해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서구, 포트홀 긴급 보수 작업 해빙기를 맞아 6일 광주 서구 능성동 포트홀 발생 도로에서 건설과 도로팀이 긴급 보수 작업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철강·이차전지 위기극복 대책 촉구

광양·순천상의, 정부에 '산업위기 대응 공동 건의' 전달

광양상공회의소와 순천상공회의소는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광양만권 산업위기 선제대응을 위한 공동 건의'를 정부와 국회, 전남도에 각각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광양상의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철강, 이차전지 산업 중심도시인 광양시와 순천시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경쟁력 하락과 지역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실질적이고 강력한 선제조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광양시와 순천시의 '산업위기대

응지역' 지정,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철강 분야를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로 명시하는 법안 개정, 철강 및 이차전지 등 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을 통한 전기료 인하 등 건의했다.

우광일 광양상의회장은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 될 것이며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존을 위한 기업이 자구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국제선 임시취항·달빛철도 예타 면제 요청

고광안 市행정부시장, 국토부2차관 면담 공항·철도 등 현안사업 국토부 협조 건의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구축계획 승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역 공항·철도 현안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6일 나주시 다시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1공구 건설현장을 찾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지역 공항·철도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고 부시장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건의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의 상황과 지역민들의 국제선 취항 여론을 전달했다.

고 부시장은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광주시 도시철도망(광천상무선) 구축 계획'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했다.

광천상무선은 도시철도 1·2호선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해 광천권역과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되는 연장 7.78km의 동서축 횡단 노선이다. 광천권역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해 도시철도 수요가 많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기차첨피어스빌드 등을 경유한다. 광주시는 광천상무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추진 노선으로 선정, 지난 달 말 국토부에 구축계획을 제출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와 기획재정부 예타 등 행정절차 마무리를 통해 오는 2032년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 부시장은 또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함께 건의했다.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영호남 1800만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로, 2021년 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다. 지난해는 261명의 역대 최대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현재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로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완도-제주도 해상경계 권한쟁의 대응 머리 맞대

도, 대응협의회서 실효적 지배 뒷받침 자료 발굴 등 논의

전남도는 10개 연안 시군과 법무법인 세종, 완도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 등 민·관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도청에서 해상경계 권한쟁의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남(완도군) 이 사수도 인근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사수도 인근 해상해역은 지리적·어업적 특성상 완도군의 어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산업과 해상교통의 중요한 요충지다.

이에 전남도는 제주도의 심판청구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 법적·행정적 소송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 관계자로 구성된 대응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 추진경위, 심판청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및 실태조사 자료 발굴, 법적·행정적 대응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과 관련해 진행 중인 전남(완도군)과 제주도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바로결혼



CMO 이무송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호남대표 전지연